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	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 하는 성장
<div>보도</div>		<div>배포 후 즉시</div>		<div>배포</div>	<div>2019.6.26(수)</div>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7)		담 당 자	송 병 관 서기관 (02-2100-2659)	
	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라 성 채(02-3774-8505)			박 승 배 부서장 (02-3774-8690)	
	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김 성 태(02-3774-9502)			이 호 성 부서장 (02-3774-9700)	

제 목 : 혁신기업 IPO 추진을 위한 업종별 상장관리가 도입되고, 스케일업 기업에도 기술특례 상장이 허용됩니다.

- 「혁신금융 추진방향」(3.21일)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
-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
상장규정 개정을 승인

■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**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**

① 바이오·4차산업혁명 관련 **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 심사*** 기준 적용

- *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, 4차산업
혁명 관련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

②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**관리종목 지정요건*** 차별화

- *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
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면제

■ 우수 기술기업의 **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**

①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*으로 확대

- *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%이상 증가한 기업

②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 면제

I. 추진 배경

-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AI, 블록체인, 바이오, 핀테크 등 신기술 위주의 혁신기업의 창업·성장이 증가
 -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간 혁신기업의 IPO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

※ <참고> 혁신기업 상장 촉진을 위한 IPO 제도 개편 내용

(’16.12월) 이익미실현 기업 및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기업 상장 허용
(’18.4월)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 요건 개편
(’19.4월)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제도 확대

- 그러나, 그간의 제도 개선은 상장 요건 중 이익, 매출액, 시총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혁신기업의 경우 상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*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

* 특례상장 질적심사 요건이 일반상장과 동일하게 현재의 영업상황을 중심으로 구성

- ➔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IPO를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특성에 맞게 상장·관리제도를 개편할 필요

- 또한, 외국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도 반영

II. 주요 내용

1

업종별로 차등화된 상장심사 기준 적용 <코스닥>

가. 현행 제도 및 문제점

- 상장심사 시 질적심사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현재의 영업 및 시장상황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혁신기업에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 존재

나. 개선방안

[1] 4차 산업

- ☐ **(적용대상)**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
- ☐ **(질적 심사요건 개선)**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, 기술성,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

현 행	개 선
(영업상황) 매출처와의 거래지속 가능성, 신규 매출처 확보가능성 등	(혁신성) 주력 기술·사업의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 등
(기술성) 기술개발 단계·자립도·난이도 등	(기술성) 주력 기술의 실현·사업화 가능성 및 R&D역량
(성장성) 상장후 이룬 시간내 매출·이익창출 가능 여부	(성장성) 연관 4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

[2] 바이오 산업

- ☐ **(적용대상)** 기술특례·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*
 - * 국가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 및 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신약연구개발 전문 업종
- ☐ **(질적 심사요건 개선)**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

현 행	개 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• 기술의 완성도·차별성 •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규모 • 기술인력의 전문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•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• 임상 돌입 여부 •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·계획 •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

가. 현행 제도 및 문제점

-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*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

* 일반 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부터 적용

-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신약개발 등 핵심분야에 역량에 집중하지 못하여 성장성 저하 우려

나. 개선방안

① 일시적 매출 악화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

- (대상) 기술특례 ·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
- (특례)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,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*

* 다만,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

② 우수 기술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 면제

- (대상) 기술특례 · 성장성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* · 시장평가** 우수기업

* 연구개발 우수기업: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

** 시장평가 우수기업: 일평균 시가총액 4천억원 이상

- (특례) 매출액 요건 면제

【 기술 · 성장성특례 기업 업종별 관리종목 지정요건 적용방안 】

구 분	현 행	개 선(안)
제약·바이오 외 기업		(좌 동)
제약·바이오 기업	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(상장 후 5년간은 면제)	최근3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
연구개발·시장평가 우수기업		미적용

가. 현행 제도 및 문제점

-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운영 중이나, 특례대상이 한정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
 - 국내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여 유니콘 기업, 해외진출 기업 등은 활용이 불가
 - 상장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평가이외에 거래소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기술 심사가 중복되는 측면

나. 개선방안

① 기술특례상장 이용 가능 기업 확대

- 스케일업 기업* 및 해외 진출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

*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%이상인 非중소기업

- 다만, 외국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

※ <참고> 외국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

- ① (회계투명성 강화) 외감법상 규제 적용
- ② (대상기업) 적격 시장* 소재국가 설립기업(사업자회사 포함)
 - * NYSE, 나스닥, 유로넥스트(프랑스 등), 동경, 런던, 독일, 홍콩, 싱가포르, 호주, 캐나다
- ③ (기술평가등급) 복수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 이상
- ④ (상장주선인 자격제한 등) 최근 3년 외국기업 주선실적 &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을 것,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한도 상향(25억원→50억원)

②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 기술성 심사 면제

-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경우(AA 이상) 거래소의 기업 계속성 심사* 중 기술성 심사를 면제

* 영업상황, 성장성, 기타 경영환경은 현재와 동일하게 심사

(1) 상장 시 이익 요건 적용 합리화

☐ (현행) 코스피 상장 요건 중 이익(30억원)을 영업이익, 세전이익,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

☐ (개선) 주요국 시장*,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일원화

* 세전이익 : NYSE, NASDAQ, 동경, 싱가포르 / 영업이익 : 홍콩

(2) 주식분산요건 개선

☐ (현행) 주식분산 관련 진입·퇴출요건 수준이 다소 높은 측면

* (진입) 주주 700명 & 지분 25% / (퇴출) 주주 200명 or 유동주식수의 10%

○ 우선주 등 종류주식의 상장시 지분 분산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공모를 의무화

○ 주식분산 관련 퇴출 요건(유동주식수 10%미만)이 자진상장폐지의 최소 지분율(5%) 요건보다 높아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업이 악용 소지

☐ (개선) 주식 분산요건 중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

○ (진입) 일반 주주수를 500명으로 완화 (코스닥과 동일)

* NYSE·NASDAQ 400명, 홍콩 300명, 싱가포르 500명

○ (종류주식) 이미 분산된 종류주식은 의무공모 폐지

○ (퇴출) 자진상폐기준(5%)과 동일하게 5%로 인하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들었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